

제4차 산림기본계획 상의 문제점과 대안적 의견

윤여창 (서울대학교)

1.1 국내 목재생산 계획

- ① 목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목재수입의 안정공급체계를 확립한다는 정책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정책간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어느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 알 수 없음.
- ② 국산재 소경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적최대벌기령으로 벌기령을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는데,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토지기망가에 의한 최적벌기령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. 따라서, 이 정책은 현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.
- ③ 표고, 밤, 송이 등 전략 임산물의 생산자원을 위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(약 1800억원)하는 것은 WTO체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단순생산비 지원보다는 장기적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기술개발 부문에 집중투입하여야 할 것임.

1.2 국산재 이용촉진 정책

- ① 목재자급률 제고(4% -> 10%)를 위한 수요창출 정책수단으로서 집성재, 보드류산업, 목조주택 산업등을 육성하는 것과 관세조정 등을 들고 있으나,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.
특히 수입원목에 대한 낮은 관세하에서는 국산재의 생산비절감 없이는 국산재 수용의 창출이 불가능할 것임.
- ② 가공원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실현불가능할 것임.

1.3 국내 임산물유통 정책

- ① 국내재 유통을 임협조직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시장진입과 진출의

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시장기능중심의 경제운용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유통체제를 포함한 유통질서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.

② 특히 외재의 경우 민간 유통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목재유통의 이원화가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효과적일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③ 이러한 임산물 유통질서의 개선문제는 현재 농림부에서 발족시킨 “유통개혁 위원회”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.

1.4 국내 임산가공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

① 원료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기술, 자본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재 집중이용형으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임.

② 외재를 위주로 이용하는 목재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③ MDF와 펄프산업은 국산 소경재 및 폐재를 주로 이용하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는 높지 않으나 수종개선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적정규모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요망됨.